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2월 4일 (목)

CONTENTS

-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이슈브리프

(IB 2021-02)

CONTENTS

I.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1

II.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14

III.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 24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장경수

발행일: 2021년 2월 4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2월 1째주)는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업을 통해 한반도/대북정책을 전망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해보고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제1편: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관할하는 국무부 라인업을 보면, 장관에 토니 블링컨(59), 부장관에 웬디 셔먼(72),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성김(61), 그리고 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정박(47)이 포진. 同 라인업의 특징은 과거 북핵/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중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대북 다루기'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이에 당초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북접근법 전면 재검토가 발표되면서 향후 정세변화에 귀추가 주목됨

제2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제방훈 전략기획위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19년 한 해만 약 20만 건이 확인, 860억원이 환수결정되는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임. 기재부는 '17년 7월부터 부정 수급 의심 징후를 포착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2년간 약 5,05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1,466건의 부정징후 의심 사례를 각 부처에 통보. 하지만 통보받은 부처는 약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확인.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제3편: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정창훈 前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장경수 선임연구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보궐선거가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임 시장의 임기동안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따른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 △감염병 위기에도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 절대 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에도 서울시 지원대책은 미흡, △주민 의사 무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용세습 등의 실정을 분석함. 더불어 청년실업과 여성 성폭력 대책으로 △청년 지업사업 확대, △여성부시장제 신설 등을 제안함

1.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작성: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lee.youn.seek@ydi.or.kr)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우리와 관련 깊은 對동북아, 對한반도, 대북정책 및 북핵 협상 등을 직접 다루는 부서에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CIA 및 DNI 등이 있음. 현재 수장(장관, 국장, 보좌관) 인선은 마무리된 상태이고, 부장관 및 실무그룹의 인선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짐. 그중에서 특히, 對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을 관할하는 국무부 라인업을 보면, 장관에 토니 블링컨(59), 부장관에 웬디 셔먼(72),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성김(61), 그리고 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정박(47)이 포진. 同 라인업의 특징은 과거 북핵/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중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대북 다루기'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이에 당초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북접근법 전면 재검토가 발표되면서 향후 정세변화에 귀추가 주목

1.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ABT 정책' 본격화

- 1.20(수) 12:00,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바이든 (Joseph R. Biden)의 취임식이 거행되며, 新정부가 공식 출범
 - 그는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democracy has prevailed)”며,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의 부상”을 경계하는 등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미국의 통합’을 강조
 - 즉, 양분된 미국을 통합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미국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뜻을 피력(*민주주의 11회, 단결 8회 등)
 - 취임식 후 바이든은 즉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그리고 멕시코 장벽설치 중단 등 2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적극적 ‘트럼프 지우기(ABT: Anything But Trump)’ 행보에 나섬

- 바이든의 진단은 트럼프가 집권 내내 보여준 대내외적 갈등과 혼란이 바로 “미국 사회의 분열과 리더십 추락”의 원인이었다고 봄
 - 대내적으로 인종 갈등과 反유색인종 정서를 만연시켰고 빈부 격차도 심화시킴으로써, 300년 이어온 美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했다고 평가
 -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와 전통적 동맹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국제적 규범과 가치의 손상 및 글로벌 리더십을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
-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는 미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리더십 복원을 위해 임기 초반 ‘트럼프 지우기(ABT 정책)’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 ‘ABT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반에 두루 나타나는데, 후보시절 공약과 민주당 정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 ※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 △경기부양과 부자증세, △신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교육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 △선택적 복지 접근성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 특히, 同 기조는 대외정책 분야에서 더욱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 바이든은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가 美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리더십 복원을 위해 트럼프가 탈퇴한 국제기구 및 협약 등에 재가입하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천명
 -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신정부를 이끌어갈 외교안보 인사들의 면면과 발언을 종합하면, 한결같이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으로 귀결
- 이에 同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평가하고, 향후 이들이 추진할 대한반도 및 대북정책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2. 외교안보라인 인선 및 평가


-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對中, 對한반도, 對北정책(북핵 협상) 등을 다루는 부서 및 조직에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CIA 등이 있음
 - 현재 수장(장관, 국장, 보좌관) 인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부장관과 실무그룹의 인선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부처의 수장뿐 아니라 부장관과 실무진(차관, 차관보 등)도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진용을 완비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 기조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세팅되기까지 통상 3~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

① 국무부 라인업

- 국무부는 장관에 토니 블링컨(59), 부장관에 웬디 셔먼(72),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에 성 김(61), 그리고 부차관보에 정 박(47) 등이 내정되어 업무에 돌입한 상태
 - 현재 블링컨은 인사청문회(1.19)를 거쳐 상원의 인준(1.26)을 마쳤고, 셔먼 부장관도 대통령의 지명(1.16)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 중임
 - 또한, 성 김이 ‘대행’ 꼬리표를 떨지 유동적인 가운데, 외교가에선 “정식 인사 前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한시적 자리”란 시각이 우세
 - 특히 한반도 담당 부차관보에 정 박이 임명되면서 대북정책특별대표 추가 인선이 남은 상태이긴 하지만, 향후 북핵협상에 관심이 집중

〈표 1-1〉 국무부 라인업의 주요 이력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국무장관	 <p>토니 블링컨 (Antony Blinken)</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미 뉴욕주 뉴욕 출생 - 하버드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졸업 - 2009~2013년 바이든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 2013~2015년 오바마 대통령실 국가안보 부보좌관 - 2015~2017년 국무부 부장관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과 20여 년 인연을 맺어온 최측근으로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주도 - 2016.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대북제재 강화에 적극 앞장서는 등 강경 기조로 분류 - 2015.7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이끌어냄
부장관	 <p>웬디 셔먼 (Wendy Sherman)</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미국 출생 - 보스턴 대학교 학사, 메릴랜드 대학원 사회학 석사 - 2000~2001년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 조정관 - 2011~2015년 국무부 정무차관 - 2015~2016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실무진과 ‘대면 협의’ 경험이 풍부하며,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면담 -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정권 붕괴가 임박했다고 느낄만큼 혹독한 제재가 필요”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동아태 차관보	 <p>성 김 (Sung Y. Kim)</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한국 출생(미 시민권 취득, 한국계 미국인)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2008~2011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 - 2011~2014년 제22대 주한미국 대사 - 2014~2016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2016~2021년 필리핀 대사, 인도네시아 대사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수석대표 및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거친 자타 공인 “북핵통이자 한반도 전문가” -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설정에 성 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전망
부차관보 (북한 담당)	 <p>정 박 (Jung H. Pak)</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생 한국계 미국인, 뉴욕 퀸즈에서 성장 -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 미국 역사 전공(역사학 박사) - 2009~2017년 CIA 및 DNI 북한담당 정보분석관 - 2016~2017년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 - 2017~2020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반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므로, 향후 대북정책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 文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

○ 이렇게 볼 때, 국무부 라인업은 과거 북핵/북한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중용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란 평가가 가능

- 블링컨은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고,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장관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 김정일을 직접 면담한 바 있으며,

- 성 김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이자 2018년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실무 대표를 맡았고, 정 박은 CIA와 DNI 등에서 북한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한 자타공인 ‘북한 전문가’
- 따라서 이번 국무부 라인업은 북한에 결코 녹록치 않은 대미 협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북한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는 진용으로 평가

② 국방부 라인업

- 국방부는 장관에 로이드 오스틴(58), 부장관에 캐슬린 히스, 그리고 정책 차관에는 콜린 칼, 아태담당 차관보에는 일라이 래트너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 오스틴은 美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으로 관심을 받으며, 상원 인준 청문회(1.22)를 ‘贊 93표 vs. 反 2표’로 가볍게 통과
 - 다만, 41년 군생활 동안 주로 유럽과 중동(중부지역 사령관)에서 근무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태 지역 경험이 없는 게 단점으로 평가
- 히스 역시 최초의 여성 ‘팬타콘 넘버2’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에 관여한 바 있어, 오스틴 장관의 부족한 對中 경험을 보완해 미중관계를 조율해 나갈 책임자로 평가

〈표 1-2〉 국방부 라인업의 주요 이력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Lloyd Aus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 앨라배마 주 모빌 출생 - 미국 육군사관학교, 오번대학교, 웨스턴대학교 졸업 - 2013~2016년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4성 장군) ○ 인선 배경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중부지역 사령관이자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 - 41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근무했고, 중부사령관 당시 IS 소탕작전을 지휘 - 단,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복무 경험이 없어서, 동아태의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음
부장관	 캐슬린 히크스 (Kathleen Hi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미국 출생 - 매릴랜드대학교 졸업, MIT대학교 정치학 박사 - 2009~2012년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부차관 - 2012~2016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 - 2017~2020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 인선 배경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추진에 관여하면서 미중관계를 점검 - 중국의 부상에 대해 다수 기고, 특히 트럼프의 주한미군 약화 및 감축에 부정적 견해 피력
정책차관	 콜린 칼 (Colin Kah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간대학교 학사,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 2009~2011년 미 국방부 중동담당 부차관 - 2014~2017년 오바마 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 및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인선 배경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동맹관계 중시, 이란 및 중동문제 전문가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아태담당 차관보 (유력)	일라이 래트너 (Ely Ratner)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2012년 국무부 중국·몽골 담당 부보좌관 - 2015~2017년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바이든 캠프에서 동아시아 워킹그룹 총괄 지휘 - 신미국안보센터(CNAS) 부소장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 - 톱다운 방식과 냉전적 해법 지양, 바텀업 방식 지향

- 국방부 라인은 美 역사상 최초의 흑인 장관과 여성 부장관이란 다소 파격적인 인선 하에, 실무그룹엔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상보성을 유지한 인선으로 평가
 - 특히, 정책적으로는 중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아태 지역에서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중국 전문가, 히스와 래트너 배치)한 인선

③ 백악관(NSC),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등

- 백악관 NSC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45)을 지명하고, 인도 태평양 조정관에는 커트 켈벨(64)을 임명한 상태
 - 설리번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가장 젊은 NSC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란 핵문제, 북핵문제 등에 전문성과 강점이 있음
 -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맹국들간 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북핵 포기 대가의 부담을 중국도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
 - 켈벨은 외교관 출신으로 동아태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의회와의

관계도 원만해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전략' 설계 및 수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자적 네트워크가 향후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므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는 윌리엄 번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에이브릴 헤인스가 지명됐고, 현재 인준청문회를 통과하고 업무 중임

- 번스는 국무부에서 33년 근무한 정통 외교관으로, 중동 평화협상 및 이란 핵합의 타결 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자타공인 “중동통”

- 헤인스는 청문회(1.19)에서 “북한을 중국 등과 함께 주요 위협국으로 분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관련 정보를 분석하겠다”고 밝힘

• 특히, 지난 7월 의회 행사에서 북핵 협상에 대해 “단계적 접근법이¹⁾ 큰 충돌없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목

〈표 1-3〉 백악관, CIA, DNI 라인업의 주요 이력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Jake Sullivan)	○ 주요 이력 - 1976년 버몬트 주 벌링턴 출생 - 예일대학교 로스쿨, 영 옥스퍼드대학교 졸업 - 2010~2013년 국무부 부비서실장 및 정책기획 국장 - 2013~2014년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인선 배경 및 특징 - 동맹국들과 협의 하에 북한의 전반적 핵능력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 - 단기적 북한 핵확산 감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의 필요성 제시(2020.9월) - 이란 핵협상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이란 핵 합의(JCPOA)를 옹호

1) 헤인스가 말한 단계적 접근이란 “핵-미사일 실험 동결 외에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중단과 검증, 또한 동결과 검증 단계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인도 태평양 조정관	 <p>커드 캠벨 (Kurt Campbell)</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출생 - UC샌디에고 대학교 졸업 - 2009~2013년 前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 2013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대통령 특별보좌관 -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장/공동창립자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동아태 지역의 외교를 총괄하며,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설계 - 북핵 및 북한문제 전문가로서 '대중국 견제 외교'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 - 톱다운 방식과 냉전적 해법 지양, 바텀업 방식 지향
CIA 국장	 <p>윌리엄 번스 (William Burns)</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6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브래그 출생 - 英 옥스퍼드대학교 졸업(국제관계학 박사) - 2005~2008년 주러시아 미국 대사 - 2011~2014년 국무부 부장관 - 2015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회장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건부터 오바마까지 5명의 대통령 시기에 국무부에서 33년간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 - 중동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이란 핵합의 타결 과정에 미국 대표단으로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인선 배경은 풍부한 외교적 경험,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회복, 러시아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분석
DNI 국장	 <p>에이브릴 헤인즈 (Avril Haines)</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 출생 - 시카고 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 - 2013~2015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 2015~2017년 국가안보부 보좌관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CIA부국장에 임명돼 중앙정보국 역사상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 - 특히,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백악관 관리 중 한명으로 꼽힘

3. 향후 대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지금까지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즉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CIA와 DNI의 라인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았음
 - 특징은 부처 內 전문 분야간 상호보완성과 부처들간 정책적 균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 특히, 국방부는 ‘최초의 흑인장관’이란 정치적 상징성 부각을 위해 다소 소홀할 수 있는 업무적 균형을 부장관과 실무진을 통해 보완
 - 즉, 오스틴의 경력은 중동에 특화되어 동아태 지역이 소홀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를 중국 전문가인 부장관을 기용해 균형을 맞춤
 - 또한, 캠벨(NSC 아시아 조정관)이나 번스(CIA 국장)의 기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위직 관료를 기용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업무 장악 및 추진 가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
 - 아울러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최측근 참모들(블링컨, 설리번, 콜린 칼, 일라이 래트너 등)을 곳곳에 배치해, 대통령의 생각을 아래로 투영시키면서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 한편, 국무부 라인업을 보며 주목되는 건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 문제, 즉 비핵화 협상이 생각보다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점
 - 라인업이 북핵/북한문제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귀환해 포진한 상태라,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할 물리적 시간이 따로 필요 없음
 - 또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및 한반도 상황을 교육시켜야 할 부담이 없어졌다는 이점이 생긴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빠꼼이들이라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듯이 대할 수만도 없다는 부담감이 상존

○ 종합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전통적 동맹관계의 복원”이며, 지역으로는 중동(이란)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이런 관점에서 대중정책, 대한반도정책, 대북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대중정책: “협력, 경쟁, 대치의 혼합정책”

- 우선 對中정책은 “경쟁과 협력의 병행 추진”이 될 것이며, 켈빈과 히스 등이 ‘新아시아 전략’을 설계해 움직일 것으로 보임

• △협력분야(Cooperation): 보건, 기후변화, 북핵 등, △경쟁분야(Competition): 경제 통상, 5G 등, △대치분야(Confrontation): 남중국해, 인권문제 등

- 예상되는 ‘신아시아 전략’의 골자는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다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경쟁적 우위를 지켜나가는 것임

② 한반도 정책: “한미일 공조복원을 통한 북핵 다루기”

- 對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복원을 통한 대중 견제 및 대북 압박”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한미간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 정부의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이란 기조 하에 조속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발생할 전망

- 반면, 한미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및 북한인권 압박시 文정권과의 이견, 그리고 대중 압박에 대한 미국의 동참 요구에 한국 무시하며 생길 갈등 등임

③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2” => “대북정책 재검토”

- 대북정책은 당초 ‘전략적 인내 version-2’를 예상했으나,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보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대북 다루기’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가능

※ ‘전략적 인내-2’: 전통적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 연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기를 압박하는 정책

- 특히, 블링컨이 인준청문회(1.19)에서 “대북정책 및 접근법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안보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도 동등하게 다룰 것을 강조
 -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소홀했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도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 또한, 백악관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1.23)을 통해 “대북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

○ 이렇게 볼 때, 현재 미국은 북한을 잘 아는 참모들을 전진 배치하며 ‘ABT(反 트럼프)’에 기반한 정책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데, 文정권은 여전히 ‘묻지마식 대북 유화책’을 고집하고 있어 한미간 마찰이 우려

- 우리는 정부의 한미간 엇박자가 될 수 있는 행보에 자제를 요청하고, 한미간 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촉구
- 특히, 우리 정부가 한미간 조율 없이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마련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한미간 불협화음만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 따라서 북핵 해법을 찾고, 평화 변영의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에 기반해 북한을 비핵화 길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해야 함

II.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작성: 제방훈 전략기획위원 (jbhkkm@daum.net)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19년 한 해만 약 20만 건이 확인, 860억원이 환수 결정되는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임. 기재부는 '17년 7월부터 부정 수급 의심 징후를 포착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2년간 약 5,05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1,466건의 부정징후 의심 사례를 각 부처에 통보. 하지만 통보받은 부처는 약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확인.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1.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현황

□ 매년 부처별 부정 수급 건수와 환수금액 급증 추세

-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범위 내 지자체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과정 중 지출증빙 미비, 집행오남용, 횡령 등 사회적 문제 발생
-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4만건 부정 수급에 대해 350억원이 환수 결정, 2019년의 경우 20만건 부정 수급에 대해 860억원이 환수 결정 되었음
- 매년 부처별 부정 수급 건수와 환수 금액이 크게 증가 중인 가운데, 2020년 현황은 현재 부처별로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진행 중

〈표 II-1〉 2018~2019년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부처명	환수결정 건수	환수 결정액	부처명	환수결정 건수	환수 결정액
2018	고용부	661	20.6	산림청	5	3.0
	과기부	5	18.4	소방청	1	0.0
	교육부	25	0.1	여가부	771	3.0
	보훈처	1,524	0.8	외교부	2	1.5
	국토부	27	10.4	중기부	1	0.3
	농림부	19	6.8	통일부	1	0.0
	문체부	7	1.9	특허청	6	22.1
	법무부	10	0.4	해수부	2	1.3
	복지부	37,786	258.1	환경부	3	0.2
	소계	40,856	349.0			
2019	고용부	95,293	492.8	법무부	4	0.03
	과기부	9	17.8	복지부	108,097	262.4
	교육부	23	0.3	산림청	6	0.2
	보훈처	935	0.6	산자부	11	17.6
	국토부	4	0.3	여가부	682	4.4
	국회	17	0.3	중기부	23	30.7
	기재부	8	0.1	해수부	606	11.5
	농림부	400	5.2	행안부	4	0.2
	문체부	15	17.9	환경부	15	0.2
	소계	206,152	862.6			

○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부처별 자체 및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 신고, 기재부의 부정징후 의심 통보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접수되며, 이에 대한 각 부처별 자체 적발 노력을 통해 확인 중

- 이 중 소관부처에 신고된 부정수급 신고 현황은 금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520건이 확인되었음. 매년 평균 173건 수준임

〈표 II-2〉 최근 3년간 소관부처에 신고 된 부정수급 신고 현황

부처명	신고건수(건)		
	'18	'19	'20.5월
고용부	20	24	14
농식품부	6	-	1
복지부	151	160	143
문체부	-	1	-
합계	177	185	158

2.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의심 징후 감시 시스템의 현주소

- 기재부 부정수급 의심 징후 통보에도 부처별 자체적발 실적 매우 저조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에 근거해 '17.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으로 2018년 사업부터 보조금 집행정보를 모니터링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이를 부처 및 지자체로 통보 중
 -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통보받은 부처 및 지자체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5조의 2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기재부는 2018년 사업을 대상으로 부터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에 약 5,053억원 규모 11,466건의 상당한 양의 부정 징후 의심 정보를 각 부처별로 통보
- 기재부의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전달받은 부처는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
 - '17년 집행보조사업에 대한 2018년도 모니터링의 경우, 기재부가 부처에 4,291건의 부정징후 모니터 결과를 통보했으나, 이를 통보 받은 부처는 0.4%에 해당하는 18건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 '18년 1월부터 '19년 6월 집행된 보조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2019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7,175건의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통보했으나, 이를 접수받은 부처는 단 2.1%에 해당하는 154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표 II-4〉 '17.7월부터 'e나라도움' 통한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

점검 연도	모니터링 대상	부정 의심사업 통보건수(기재부→부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부처 자체 적발)
2018년도 모니터링	'17년 집행 보조사업	4,291	18 (0.4%)
2019년도 모니터링	'18년 1월~'19년 6월 집행 조사업	7,175	154 (2.1%)
합계		11,466	172 (1.5%)

□ 대표적인 다섯 가지 패턴 부정징후 통보

- 기재부는 보조사업 신청자 중에서 비수급자를 걸러내 선정단계에서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부정수급 방지 기능을 구현 중이며, 보조금 실시간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 징후 모니터링 후 일정 패턴을 탐지 중
- 기재부는 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을 다섯 가지(▲가족간 거래 ▲급여성 경비 ▲지출증빙 미비 ▲집행오남용 ▲특정거래 관리)로 범주화해 부처별로 통보
- 세부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4,743건으로 가장 많고, 사망자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인건비 부정 집행도 3,306건.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준 ‘가족간 거래’도 2,024건(18%) 확인

〈표 II-5〉 최근 2년간 부정징후 의심사업 유형별 현황

부정징후 유형		추출사업수	부정징후 금액(원)
2018	가족간 거래	518	15,937,280,144
	급여성 경비	1,272	29,843,168,963
	지출증빙 미비	1,958	59,575,189,100
	집행오남용	83	387,836,628
	특정거래 관리	460	126,146,975,663
	합계	4,291	231,890,450,498
2019	가족간 거래	1,506	42,311,703,455
	급여성 경비	2,034	48,768,900,465
	지출증빙 미비	2,785	82,582,093,764
	집행오남용	539	1,733,436,020
	특정거래 관리	246	98,005,245,455
	자산관리	65	-
	합계	7,175	273,401,379,159

□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모니터링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

- OECD 국가중에서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부처별 통보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되는 사례가 없을 만큼 사실상 대한민국 사례가 유일
- 주된 사유로는 IT강국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보조금을 통한 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드물기 때문임
 - 디브레인(dBrain: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 사례와 같이 대한민국은 전자정보 및 국가회계정보 시스템 구축면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동남아 및 스리랑카 등 국가들은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수준
 - 미국의 경우 정부재정에 대한 비리가 개입된 경우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등 시스템상 차이가 있음

3.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모니터링의 문제점

□ 부정 수급 감시 통보 따른 부처별 자체 적발 미흡

- 보조금 반환 및 제재 등 조치사항에 대한 권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책임하에 관리
 -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과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0~36조, 참고2)
- 기재부의 시스템에 의한 부정수급 징후 감시와 부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받은 부처별 자체적발률이 1.5%에 그치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시정조치를 기재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 기재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자체 적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5조의2」 위배 소지가 있음

〈표 II-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5조의 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부처별 부정수급 사례 중 가족 간 거래 만연

- ‘가족간 거래’란 예컨대 학교에 배트와 글러브 등 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체부의 ‘연식야구 활성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야구협회가 선정되고, 동 협회에서 배트와 글러브를 구입하는 곳이 거래처가 되는데 이 협회장과 거래처가 가족인 경우를 말함
- 기재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은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정보에 포함된 인적사항을 대법원 등을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전량 ‘가족간 거래’를 적발 중
 - ’19년 문체부는 보조사업자로 A협회를 선정해 1억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추진, A협회가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가 A협회장의 아들이었음
 - ’18년 과기부는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거래처 B기업 및 C기업과 거래한 5천9백만원이 확인돼 전액 환수처리

- 지난해 행안부 보조사업 대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D 기업과 거래한 4천8백만원이 확인되어 전액 환수처리됨
- 조사결과 부친의 업체는 과업 수행할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였음

〈표 II-7〉 가족간 거래로 확인돼 환수처리 된 보조사업들 현황

소관부처	사업연도	부정징후 통보유형(자기 거래 및 가족간 거래)
과기부	2018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래처 B 기업 및 C기업과 거래한 내역('18.11월) 59백만원이 확인해서 환수처리했음
행안부	2019	보조사업 대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D기업과 거래한 내역('19. 6월) 48백만원이 확인됨.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과업수행역량이 있는 거래처였다고 소명을 했으나, 실제 확인결과 용역결과물을 제출을 했지만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가 과업 수행할 역량이 없는 업체로 확인됐음.
여가부	2017	보조사업 대표자의 가족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17.1월~8월) 15백만원이 확인됨. 보조사업에 직원을 채용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인력으로 남편을 채용해서 1천5백만원을 지급했음. 그러나 남편이 기안을 올리거나 메일을 주고받거나 사무실을 출입한 흔적 등 아무것도 소명하지 못해서 전액 환수처리
행안부	2018	보조사업 대표자의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F기업과 거래한 내역('18. 10월, 12월) 31백만원이 확인됨
산업부	2019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래처 G기업과 거래한 내역('19. 6월) 44백만원이 확인해서 환수처리
농림부	2018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래처 H 기업 및 I기업과 거래한 내역('18.9월~12월) 62백만원이 확인해서 환수처리
국토부	2017	보조사업 대표자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J기업과 거래한 내역('17. 10월) 1.5백만원 확인

4. 감시 시스템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개선

- 부처·지자체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와 부처·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 정례화 추진
 - 수집한 사례 분석과 ‘e나라도움’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존 모니터링 패턴에 대한 정교화 작업 후 이 결과를 다시 ‘21년도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순환시스템 도입 검토
- 부처·지자체 자체점검 견인
 - ‘e나라도움’에서 추출한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통보 후 부처·지자체의 자체 점검기간(통보 후 45일 이내) 동안 자체 적발 이행을 공개하는 등 집중적인 자체 점검 견인

㉡ 부처 자체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부처의 자체 적발률 제고 방안 모색
 - 부정징후 의심사업 중 상당수 사업(또는 샘플링)에 대해 부처·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자체 적발실적 보고율을 상향하는 방법 등
- 부처에 대한 기재부의 점검 및 권한 강화 관련 법적 근거 신설
 - 부처와 지자체가 보조금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집행률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기재부도 이를 알면서 묵인 방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가족간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 단, 해당 거래처만 수행할 수 있는 특허가 필요한 과업이거나 섬에 위치한 지형적 한계가 있는 특별한 경우 등은 예외적 허용

※ 책임 감수: 김창배 경제정책실 실장

Ⅲ.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작성 : 정창훈 前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chjeong61@naver.com)
장경수 선임연구원 (jang.gyeong.su@ydi.or.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보궐선거가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임 시장의 임기동안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따른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 △감염병 위기에도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 절대 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에도 서울시 지원대책은 미흡, △주민 의사 무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용세습 등의 실정을 분석함. 더불어 청년실업과 여성 성폭력 대책으로 △청년 지업사업 확대, △여성부시장제 신설 등을 제안함

1.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

□ 현황

- 전임 시장의 임기 내 재개발·재건축 389개 구역 13,330,929㎡ 정비구역 직권 해제 및 의도적인 새로운 정비구역 미지정
- 주거지역 내 아파트 높이 35층 이하 제한, 조례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50% 하향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규제

□ 문제점

-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약 25만호의 주택공급 차질 초래

〈표 Ⅲ-1〉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미공급 주택 물량

구 분	해제구역 면적(㎡)	예정세대수	법상 최고용적률 적용시
총계	13,330,929	185,919	254,839

자료: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020.10)

-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 169만 7286가구 중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19년 말 현재 16만 3599가구(9.6%)에 불과함

□ 시사점

① 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하여 주택 공급 확대

- 기존 해제된 389개 정비구역을 주민의 바람대로 재건축·재개발 시행함과 동시에 서울 시내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²⁾(다가구, 다세대 미포함) 836개 단지 322,044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추가로 16만 호 이상의 분양 아파트 공급 가능

② 청년, 신혼부부 등 특화된 전용 아파트 제공

- 한강변의 도로 상부를 공원형 대형 생태육교를 건립하며, 이들 지역이나 역세권 등에 일반 아파트 및 주거 약자(청년, 신혼부부 등) 전용 아파트 제공
 - 한강변 올림픽대로(36km), 강변북로(36km), 동부간선도로(중랑천, 탄천), 서부간선도로(안양천)

③ 고밀도 첨단 주거 공간의 마련

- 서울시 곳곳에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고밀도 첨단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추진하여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획기적 전환 및 정주 중심의 주거공간으로 확보

2) 조선일보, ‘주택보급률 100%라는 허상’ - 아파트 평균 수명 영국 128년, 독일 121년, 프랑스 80년, 한국 27년 미만!, 2020.9.7.

2. 감염병 위기에도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은 절대 부족

□ 현황

○ 서울시의 공공병원 비율 OECD 평균 73% 대비 절대 부족

- 의료기관의 94.2%가 민간기관이고, 나머지 5.8%가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군병원, 경찰병원, 보건소 등 공공기관임

※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현황 : 13개 기관 13,350개 병상

□ 문제점

○ 서울시립병원 12개이지만, 최상급의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급병원 전무

- 서울시 시립병원 12개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의료원에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고, 방사선종양학과외의 경우 위탁병원인 '보라매 병원'에 2개의 장비 보유한 실정임

○ 암환자 발병률 및 사망률 증가 추세로 암치료 대중화 시대 도래

- 서울시 산하 12개의 시립병원 중 서울의료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응급 치료 및 전문 암환자 진료를 위한 작업 필요

□ 시사점

①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이 최상급 공공의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역량 확충

- 서울의료원에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장비 설치 및 감염병·호흡기질환 전문센터 신축

② 폐업병원 인수 공공병원으로 개원, 공공의료 지원 확대

- 서울시내 연간 60여 개의 병원이 폐업, 그 중 과거 방지거병원, 이대 목동병원 폐업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인수, 리모델링하여 공공병원으로 활용

3. 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에도 서울시 지원 대책은 여전히 미흡

□ 현황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폐업 비율 증가

- 2019년 85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폐업률 기록,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적 부담 증가

〈표 III-2〉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개업·폐업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업(명)	106만 8313	110만 726	115만 9802	124만 2756	117만 8769
폐업(명)	73만 9420	83만 9602	83만 7714	83만 884	85만 2572
폐업/신규 비율(%)	69.2	76.3	72.2	66.9	72.3

자료: 국세청

□ 문제점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정부 영업금지 정책으로 인한 부담 증가

- 2.5단계 지속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이용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치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 정부 지원정책 미흡

- 전시성 '착한 임대인' 정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인한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폐업시 정부지원 철거비는 최대 200만원에 불과, 그러나 폐업시 평균 부채 4,030만원에 달함

※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 시사점

○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질적으로 확대

- 임대인에게 시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 그만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하는 선순환 구조의 지원방안 추진
- 정부의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에게 재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특정기간 공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 도입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공제제도 등 자구적이거나 공적 지원을 받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 지원

4. 주민 의사 무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재검토

□ 현황

○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2015~2020년)

- 도시재생 사업지 총 47곳 중 주거지 포함 구역 총 27곳
- 3 + 5 선도 시범사업지 선정 : 191개 사업, 예산 총 3,026억
 - 2014년 종로구 창신동 1·2·3동, 송인1동 일대 83㎡
 - 2015년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해방촌, 가리봉 등 7개 지역

□ 문제점

○ 주민 의사 관계없이 관 주도 추진으로 주민 반대

- 5년 전 서울시 도시재생구역 선정 전 주민반대 불구 이듬해 도시 재생 사업지 선정
- 종로구 창신동 일대 1,000억원, 관악구 난곡동 2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도시재생 사업 결과 색바랜 담벼락 벽화, 여전히 가파른 계단의 골목길, 주차 1대 하면 소방차·구급차 진입 불가 등

○ 주민들 도시재생사업 중지 및 공공 재개발 추진 요구

- 1,000억원 들인 창신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공공재개발 운영위원회 간 갈등 초래

□ 시사점

- 뉴타운 지정 후 해제 지역, 낙후된 지역 중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바람대로 재개발 추진
- 기존 관 주도 도시재생에서 민간 주도 개발 장려
 - 일본의 2002~2011년 도심 재개발시 2014년 완공한 도쿄 '도라노몬 힐스'의 성공적 도시재생 및 교통문제 해결 사례 참조

5. 도시의 흥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검토

□ 현황

- 2012년 '원전 하나(신고리 1호기 기준) 줄이기' 사업
 - 연간 에너지생산량 8,760Gwh를 대체 친환경에너지 전환
- 공공기관 건물 및 생활 속 가로등, 벤치 등 시설물 도입
 - 공공기관 건물 태양광 패널 '09~'18년 671곳 설치, 예산 1,467억 소요 및 관리비 연간 5억 이상 소요

□ 문제점

- 생활 속 태양광 등 시설물 설치 결과 도시 흥물화
 - 서울시내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64개 설치, 전부 고장 방치
 - 난지도 하늘공원 내 풍력발전기 5기 설치, 4기 고장 방치
 - 서울시내 하이브리드 보안등 138개 설치, 전기 생산량 전무

○ 시민·환경단체 및 운동권 출신 친여인사 협동조합에 태양광 정부 보조금 몰아주기

- 사단법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에 2014~2018년 간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248억 중 124억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로부터 물품 인수, 주택에 설치하고 받은 보조금)

※ 경기도의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 등 자격이 필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협동조합 참여가 전무함

□ 시사점

○ 가동률(15%) 낮은 태양광 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체 사업 발굴

- 태양광과 원전의 설비이용률(가동률) 감안시 1GW급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6KW의 태양광 설비 필요

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용세습제 폐지 등 경영합리화

□ 현황

○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채용 비리 감사 결과³⁾

- 정규직화 총 1,285명 중 직원 친인척 192명(14.9%)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들을 부당 취업시킨 사례)
-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5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 확정

3) 조선일보, 「서울교통공 고용세습 재심의도 감사원 기각 '6전6패」, 2021.1.16.

□ 문제점

- 실제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192명 가운데 176명(91.6%) 현재까지 재직
 -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불의’ 사례
- 2020년 서울교통공사 적자 1조원 육박 및 비합리적 조직 경영
 - 인건비 과다, 귀족노조와의 부적절한 합의에 의한 비상대기조·숙박 근무·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막대한 수당지급으로 예산낭비

□ 시사점

- 법과 규정에 의한 합리적 노사관계 설정
 - 매년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는 1만 5천여명 공사 노조와의 협상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제도화 추진
 -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법과 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 필요
 - 현재 한 명이 할 일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하는 구조, 개선 필요

7. 청년 실업자 증가에 따른 청년 지원사업 확대

□ 현황

○ 서울시는 제한적으로 청년수당을 확대 추진해 오고 있음.

- 최초 2016년 3,000명 대상, 예산 90억원에서 2020~2021년 60,000명 대상, 예산 1,808억으로 확대 시행 중

〈표 Ⅲ-3〉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명)	3,000	5,000	7,000	5,000	30,000
예산(백만원)	9,000	15,000	21,000	15,000	90,400

자료: 서울특별시 청년청

□ 문제점

○ 청년경제활동인구 감소했음에도 청년실업자 증가

- 우리나라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2019년 433만 1천명으로 10년간 0.2%(9천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는 10.6%(3만 7천명) 증가
- OECD 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403만 9천명으로 10년간 3.9%(2만 6천명) 감소했고, 청년실업자는 30.9%(18만 8천명) 감소

□ 시사점

○ 20~30대 청년들의 '헬조선' 사고 전환 정책 추진

-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형태로 청년들이 자립하여 안정화 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하여 제도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모 확대 추진
- 지역에서 공무원, 지역 지도자 등이 운영하는 '청년멘토제'를 통해 지원 여부 판단하는 방식

8.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여성부시장제 신설

□ 현황

○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및 본인 사망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 및 시민단체 활동으로 사회적 명망가의 반열에 오른 박 전 시장의 시장실 여직원 성추행 일탈 및 자살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발생

○ 서울시 전체 5급 이상 여성 간부 현황

- 2006~2020년 사이 시장, 부시장 58명 중 여성은 2명(3%), 1~3급 934명 중 68명(7%), 4급 3,713명 중 429명(11%), 5급 17,809명 중 3,331명(18%)의 분포를 보임

〈표 Ⅲ-4〉 서울시 전체 5급 이상 여성 간부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무직			1~3급			4급			5급		
	현원	여성	비율	현원	여성	비율	현원	여성	비율	현원	여성	비율
'20 현재	3	1	33	72	11	15.3	270	53	19.6	1,526	419	27.5

자료: 서울특별시 자료(2020.10)

□ 문제점

-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의 젠더 감수성 미흡
 - 젠더자문관제 신설 및 전직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간부들의 잦은 성희롱·성추행 사건 발생, 조직문화 개선 미흡
- 전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및 본인 사망으로 인한 충격
 -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까지 팬덤 정치로 인한 사회적 윤리와 성범죄 인식에 대한 근원적 회의가 발생

□ 시사점

-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권위적 장치로서 「여성부시장제」 도입 및 독립적인 위임 권한의 부여
 - 여성공무원의 권익 및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주도
 - 민간 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 조성 주도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순, 2019.9.19.~現在)

이슈브리프 2021-01 (발간일: 2020.1.14)

-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 ▶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16 (발간일: 2020.12.24)

-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이슈브리프 2020-15 (발간일: 2020.12.10)

- ▶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이슈브리프 2020-14 (발간일: 2020.11.28)

-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슈브리프 2020-13 (발간일: 2020.11.12)

- ▶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 ▶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2020-12 (발간일: 2020.10.29)

-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11 (발간일: 2020.10.15)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 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이슈브리프 2020-10 (발간일: 2020.9.28)

- ▶ 전월세전환율 2.5% 강제 인하의 타당성 검토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유통정책 제언
- ▶ 포털 SI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09 (발간일: 2020.9.17)

-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약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반’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펭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